

## 국어 정책을 위한 제언

박창원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 <요지>

#### ◆ 국어 정책의 비전과 목표

#### 공존과 도약을 선도하는 국어 정책

다언어 사회의 공존과  
한국어의 도약을 선도하는  
국어 연구·정책 수립·시행과 보급



#### 목 표

1. 국어 사용 능력의 제고
2. 국어의 정보화 및 지적 재생산 능력의 강화
3. 국어의 체계화 및 세계화
4. 국어의 문화적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 1. 서론

21세기의 세계는 영어의 세계적 공용어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영어와

인구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몇몇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는 실존의 위협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의 한국어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맞고 있다.

첫째, 국내적으로는 영어의 확산에 의해 학문적인 활동 외에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그 영역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둘째, 이와 반대로 국외적으로는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 평행하게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대미문의 한국어 봄을 맞이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넷째, 산업화와 상업화 속에서 언어를 포함한 인문학은 그 순수성만으로는 존재가 위협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책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언어 정책의 개발과 정책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국어 기본법에 규정된 국어 발전 계획 수립, 국어심의회 운영, 국어 책임관 제도 운영 등의 사업과 세계 언어 정책 기관과의 교류, 남북 언어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국어 기본법에 따라 2006년에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앞으로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5년 단위로 새로운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어 기본법에서는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에는 국어 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 국어원에서는 매년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와 국어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에서 국어의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국어 기본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국어 기본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중앙 행정 기관 54개, 중앙 행정 기관의 소속 기관 163개, 광역 지방 자치 단체 16개, 기초 지방 자치 단체 226개 등 459개 기관에 국어 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세계 언어 정책 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기관 간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세계 언어 정책 기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 이후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와 꾸준히 서로 직원을 초청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의 언어 교류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매년 남북의 언어학자가 참가하는 국제 학술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의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여러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2007년 사업 소개)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한편으로 국어 정책이 응용적인 실천 사항의 제시라는 한계를 넘어 국어 정책학이란 이론으로<sup>1)</sup>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필요한 국어 정책 몇 가지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 2. 언어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

### 2.1. 정책학적 접근

국어 정책에 관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국어 정책학을 위한 학문적 내지는 이론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 정책의

---

1) 하나의 분야가 내포와 외연을 갖춘 독립된 학문 분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이론과 영역을 가져야 하는데, 국어 정책 분야의 경우 독자적인 영역은 가졌으되 독자적인 이론을 갖추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체적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기 위한 현실적 내지는 실제적 접근이다. 전자의 접근 방식에는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법론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국어의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는 가정 아래 국가가 언어 정책을 수립하느냐(국가 개입주의) 아니면 언어 정책을 따로 수립하지 않도록 하느냐(방임주의) 하는 문제부터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누가 국어 정책을 결정하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의 논의로 이어지고, 이어서 위로부터의 방식과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논할 수 있다. 요컨대 정책학의 관점에서는 정책 의제의 발의와 채택에 관련되는 주체와 과정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과 정책 결정, 정책 집행의 사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미래로의 길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 2.2 종합적 접근 방식

언어 정책의 주제나 내용 그리고 대상은 아주 다양하다.

### 가. 주제의 다양성

2007년도 국립국어원의 사업 소개를 보면 7개의 사업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언어 정책 개발 및 정책 수행 환경 조성’에는

언어 정책의 개발과 정책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국어 기본법에 규정된 국어 발전 계획 수립, 국어심의회 운영, 국어 책임관 제도 운영 등의 사업과 세계 언어 정책 기관과의 교류, 남북 언어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설명한 후 ‘언어 정책 개발 및 정책 수행 환경 조성’, ‘국어 순화’, ‘외래어 표기법 운용’, ‘전문 용어 표준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언어 정책 개발 및 정책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1) 국어에 대한 기초 연구
- 2) 국어의 습득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 3) 언어의 비교에 대한 연구

그런데 위의 내용들은 간단하게 한 줄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학자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함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 나. 내용의 다양성

언어 정책을 수행하는 내용도 아주 다양한데, 그것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뉘어 논의되어 왔다.

- 1) 언어 순화
- 2) 언어 부활
- 3) 언어 개혁
- 4) 언어 표준화
- 5) 어휘 현대화

자국어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외국어 내지는 오용어, 남용어, 비속어 등을 순화하는 것이 언어 순화(Language purification)이고, 고어 내지는 죽은 언어를 새롭게 재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언어 부활(Language revival)<sup>2)</sup>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휘나 철자법을 바꾸거나 사용하는 언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언어 개혁(Language reform)<sup>3)</sup>이고, 지역어의 표준어 결정이나 방언 어휘의 표준어 선정 등과 관련된 것이 언어 표준화(Language standardization)이고, 기존의 어휘부를 현대의 과학적인 체계 혹은 어휘 체계에 맞게 새로운 어휘를 수용하거나 제정하는 것이

---

2) 여기에는 이미 화석화 상태인 조어법을 재생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다.

3) 사용하던 문자 자체를 바꾸는 혁명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 현대화(Language modernization)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 정책도 대체로 이를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대상의 다양성

국어 정책의 대상을 사람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된다.

- 1) 국내에 있는 모국어 화자
- 2) 국내에 있는 다문화 가정 이주민과 그 자녀
- 3)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 4) 국외에 있는 동포와 그 자녀
- 5) 국외에 있는 장단기 체류자와 그 자녀
- 6)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

한편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한 예로 중국의 경우를 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중국 동북부 3성 지역 – 동포들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 교육 등
- 북경 지역 – 대학에서의 교육,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코리아 타운 (korea town) 지역 교육 등등

#### 라. 정리

이러한 다양성을 종합하여 국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함된 다양한 변수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일의 경중과 가치의 높낮이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점들의 상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상관 계수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 2.3. 1원적 다원주의적 접근 방식

한국에서 한국어는 어떤 언어도 간섭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영어가 그러하고 중국에서 중국어가 그러하듯 한국어는 한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모여서 하는 국제회의나 외국인 가족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하는 언어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적 다문화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수용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출신이 다양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과제는 다양한 다수의 이주민이 본래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sup>

## 3. 국어 정책의 범위와 역사 그리고 현황<sup>5)</sup>

### 3.1. 국어 정책의 범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언어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 4) 이러한 사고의 기반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가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한국인의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한국어 역시 모국어처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과 동일하다.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1원적 다원주의에 대한 이론적 정립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 5) 이 부분은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으로 박창원, 진대연, 최형용 등이 2010년에 수행한 《국제 언어 정책 비교 연구》의 결과 보고서 일부를 약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언어^정책(言語政策)

### 『언어』

국가가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을 통일·발전시키려고 쓰는 정책. 표준어의 규정, 맞춤법의 확립, 글자의 통일이나 개혁, 외국어 교육, 문맹 퇴치 따위가 있다.

표준어의 규정, 맞춤법의 확립, 글자의 통일이나 개혁, 외국어 교육, 문맹 퇴치가 언어 정책의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그 범위를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일 뿐이다. ‘언어 정책’에 대해 ‘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국가 정부의 시정 방책’이라거나 더 나아가 ‘국가가 정치적인 목적하에 특정한 언어(들)와 그 사용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취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참조하면 표준어의 규정, 맞춤법의 확립, 글자의 통일이나 개혁, 외국어 교육, 문맹 퇴치 등이 단순한 ‘보기’임을 알 수 있다. 가령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국어 기본법에는 위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전문 용어의 정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17조 (전문 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가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인 ‘전문 용어’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언어 정책’은 한 나라가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언어 정책의 대상이 어떤 특정 분야에 고정되어 한정되는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 정책’에 대해 제시된 앞의 여러 정의에 따르면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행해지는 언어 관련 활동은 설사 그것이 표준어의 규정, 맞춤법의 확립, 글자의 통일이나 개혁, 외국어 교육, 문맹 퇴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더라도 ‘언어 정책’에 포함될 수 없다. ‘언어 정책’에 대한 이러한 활동을 ‘언어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국가가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개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언어 정책’의 범위에 들어온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언어 정책을 ‘국가 개입주의 언어 정책’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방임주의 언어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기관 또는 제도의 설립과 언어 사용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전자의 예라면 국가가 민간 차원의 사전 편찬, 교육, 보급 등을 지원하는 영어권은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언어 정책은 우선 한 국가 내 언어(들)의 기능과 존재 양상에 따라 ‘단일 언어 사용 정책’, ‘이중 또는 삼중 언어 사용 정책’, ‘다중 언어 사용 정책’으로 나뉠 수 있다. 아이슬란드와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은 ‘단일 언어 사용 정책’으로 묶일 수 있고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의 언어 정책은 ‘이중 또는 삼중 언어 사용 정책’에 해당되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의 언어 정책은 ‘다중 언어 사용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언어 정책을 언어 ‘계획’의 측면에서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위상(status)', ‘자료(corpus)', ‘습득(acquisition)'이 그것인데 ‘위상’은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언어의 사용 범위와 기능을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공용어나 국민어의 공인, 표준어나 규범어의 선정, 고유어의 부활 또는 보전, 자국어의 국내외 보급, 소수자의 언어 인권 보장 등이 그 범위에 들어온다. ‘자료’는 특정 언어의 체계와 형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으로서 문자체계나 표기법의 개선, 표준 규범(문법서, 사전)의 제정 및 개정, 신어 개발, 전문 용어의 정비, 어휘의 현대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습득’은

특정 언어를 교육함으로써 그 사용자의 수와 사용 능력을 증대시키려는 것인데 학교에서의 모어 또는 제2언어 교육, 원활한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각종 언어 학습, 문해력 증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3.2 국어 정책의 약사 –기관을 중심으로-

앞에서 서술한 언어 정책의 개념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언어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 국민 국가의 성립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적인 개입이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때의 언어는 효율적인 지배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국가 차원에서 표기의 표준화나 대중적 보급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신라 경덕왕 시기에 지명이나 인명 등의 표기 방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표기를 시도한 것이고,<sup>6)</sup> 둘째로 ‘훈민정음’의 창제와 보급으로 대표되는 세종의 문자 정책은 언어 정책의 측면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 중엽 당시 조선 왕조에서 집현전 학사들을 동원하여 세계 문자 사에서 처음으로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이 문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표기 방식을 시도하고,<sup>7)</sup> 그 후의 임금들이 정음청이나 언문청을 중심으로 문자 보급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sup>8)</sup>

6) 신라 제35대 왕인 경덕왕(재위 742~765)은 한화 정책(漢化政策)을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언어와 관련된 정책으로 16년(757)에는 땅 이름을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었고 18년에는 벼슬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7) 표기에 있어서 당시에 주된 관심사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한자와 훈민정음을 섞어 쓸 경우 그 표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말의 음절 말 종성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8) 언문청이나 정음청은 15세기 조선에 설립되었던 언어 관련 전담 국가 기관이

1907년 학부(學部) 안에 설치된 국문연구소는 비록 ‘대한 제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언어 정책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국문연구소는 명실상부한 정부 국어 연구 기관의 효시라 할 수 있으나 국문연구소의 대표적 업적인 1909년의 국문 연구 의정안은 공포·시행되지 못하였고,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 병합으로 광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시행된 국어 정책은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식민 지배를 영속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왜곡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하려는 조선어학회의 일련의 활동들은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 수준의 ‘언어 운동’의 범위를 넘지 못하였다.

언어 정책으로서의 국어 정책은 1945년 광복을 맞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 군정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1947년 1월에 국어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48년에는 ‘우리말 도로 찾기’의 4가지 방침을 확정하였다. 역시 미 군정청의 ‘조선교육심의회’는 1948년 10월에 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는 것을 법률로 공포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이 마련된 것도 1948년의 일이다. 전쟁 후인 1954년 이승만 정부는 최초의 정부 주도 맞춤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1958년에는 ‘한글 전용 실천 요강’이 마련되어 정부 기관은 물론, 정부의 감독을 받는 산하 단체에도 한글 전용을 권장하였다. 1956년부터 심의에 착수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도 1958년에 제정되었다.

1961년 군사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62년 ‘한글전용특별심의회’가 문교부에 설치되어 한자어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용어집을 회보의 형식으로 발간하였다. 1963년에는 학계와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문교부는 ‘문법 통일안’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1968년에는 한글 전용 5개년 계획을 의결하였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교부는 국어심의회를 중심으로 맞춤법, 표준말,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전면적

---

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에 ‘언문청’이 처음 언급되고, 《문종실록》에 ‘정음청’이라는 기관이 나타난다. 단종 때에 정음청을 폐지하고 연산군 때에 언문청을 다시 설립하였다가 중종 때에 폐지하였다.

으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국어심의회는 ‘국어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 업무를 위탁하였다. 국어조사위원회는 1979년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1984년에 로마자 표기법을 확정하여 고시하였고 나머지는 같은 해 설립된 국어연구소로 이관하였다. 1986년에는 외래어 표기법을 시행하였으며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개정안을 1987년에 마무리하고 문교부에 제출하였고 문교부는 이를 1988년에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국어연구소는 이처럼 국어 정책의 틀을 마련하였지만 임의 단체로서 정부의 국어 연구 기관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정부 부처에 문화부가 설립되고 이 안에 어문출판국(후에 문화정책국)과 어문과(후에 국어정책과)를 신설하여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어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립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연구원을 개원도록 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은 대통령령 제13,163호에 따라 1991년 설립된 기관으로 국어연구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은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하고 어문 규범을 정비하는 한편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국어 순화 자료집 발간, 국어문화학교 운영, 가나다 전화 운용 등을 통해 국어 정책의 본산으로 기능하게 되었고 2000년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2004년에 ‘국립국어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었다. 국어 정책의 장기 계획인 ‘21세기 세종 계획’을 1998년부터 2007년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한국어의 세계화 계획’을 수행하고 그 일환으로 2015년까지 모두 500개의 ‘세종학당’ 설립을 추진 중이다.

2005년에는 ‘국어 기본법’과 ‘국어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국어 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4년 11월 이후 국어 정책 기능이 문화부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으나 2009년 5월 다시 문화부 국어민족문화과로 이관되었다.

### 3.3. 국어 정책의 현황

#### 가. 1990년대 이전

앞의 기관 중심 약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까지의 국어 정책은 국어 순화, 어문 규범 정비, 한글 전용 문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 이를 외에 컴퓨터에서의 언어 처리, 남북 언어 통일, 사전 편찬 등 새로운 정책 과제가 추진되었다.

#### 나. 1990년대

1991년 문화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명시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글의 기계화 및 과학화 사업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제 규범
- 생활 언어 및 언어 순화에 관한 사항
- 한글의 역사적 변천과 방언의 조사 및 연구
- 남북한 언어 통일
- 신문·방송 언어의 사용
- 국어의 해외 보급과 해외 거주자의 국어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과 국어 관련 각종 사전의 발간
- 한자의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 다. 2000년대

2000년에 접어들어 국어 정책의 중심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국어연구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2001년과 2002년에 들어 국어 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2004년에 ‘국립국어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화되면

서 국어 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관받게 된다. 그리하여 국어 정책의 유일한 국가 중심 기관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국어 기본법’과 ‘국어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국어 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4년 11월 이후 문화부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던 국어 정책 기능이 2009년 5월 다시 문화부 국어민족문화과로 이관되었다. 즉 국립국어원이 종합적으로 주관해 오던 국어 정책 가운데 순수 정책 기능이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다시 문화부 국어민족문화과로 이관된다. 그에 따라 국어 정책과 관련된 과제도 다시 이원화된다. 문화부 국어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어 정책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어·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 규범의 정비
-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
- 국어 책임관 운영·평가
- 언어와 문자, 전문 용어 등의 표준화
- 국민의 언어 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 계층 지원
-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 지역어 발굴 및 보전
-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
-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 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
- 한국어 보급 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
-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 외국인·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

이 가운데 ‘국어·언어 관련 법령, 국어 책임관 운영·평가, 전문 용어 등의 표준화, 언어 소외 계층 지원, 공공언어 품질 향상, 지역어 발굴 및 보전,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한글 산업화, 한국어 보급 기관의 설치·

지원 등 한국어 보급,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외국인·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 등은 최근에 새롭게 추진되는 과제에 속한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추진 과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에 제시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
- 언어와 문자, 특수 언어에 관한 조사·연구
-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 자원 구축·관리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 공공 기관 및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
- 전문 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
-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
-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보급·운영

이들 가운데 '언어와 문자에 관한 조사·연구,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 자원 구축·관리,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최근에 새로 추진되는 과제이다.

또한 새로 추진되는 과제 가운데는 국어민족문화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두 기관의 공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 4. 국어 정책의 목표와 내용

### 4.1. 국어 정책의 목표

국어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대략 다음의 다섯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 가. 국어 사용 능력의 제고
- 나. 국어의 정보화
- 다. 국어의 체계화 및 세계화
- 라. 국어의 문화적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 마. 지적 재생산 능력의 강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1)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사용 능력 향상 정책 개발
  -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사용 실태 조사를 다양한 방면에서 실시하고, 상황에 맞는 사용 능력의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 2) 21세기 세종 계획의 후속 사업 개발
  -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 왔던 21세기 세종 계획이 마무리된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 결과를 이어받아 발전적으로 계승 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발한다.
- 3)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 언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체계화한다.

- 4) 언어를 포함한 인문학이 자생적인 학문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한다. 즉 내부적인 정비, 외부적인 활용과 관련해 언어학 외적인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상업적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 5) 한국어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지적 재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지적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외국어로 된 논문을 권장해 왔지만 이제 모든 학문 분야에서 한국어로 지적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한국어의 지적 능력을 축적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sup>9)</sup>

## 4.2 국어 정책의 내용

### 가. 국어 사용 능력 제고

- 1) 실태 조사: 국민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언어 특히 국가 기관의 언어와 방송 언어 그리고 통신 언어에 대한 지속적 실태 조사를 통해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저해가 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2) 국어 능력 지수 개발: 국어 능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국어 사용 능력을 과학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 3) 국어 능력 검정 제도 시행: 국민들이 자신의 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제도를 통한 국어 사용 능력의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
- 4) 쉬운 한국어 쓰기 운동: 공공언어 등에 쉬운 한국어 쓰기 운동을

---

9) 고전을 번역하여 현대에 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식을 현재의 언어로 축적하는 일이다.

펼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0)</sup>

#### 나. 국어 정보화 – 21세기 세종 계획 후속 사업 개발

- 1) 국어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21세기 세종 계획’의 사업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려면, 기존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 2) 전자사전의 효용성 제고: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개발된 전자사전이 국어 연구나 산업화에서 중심 역할을 하려면 내용이 개선·보완되어 효용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 3) 정보화 사회의 기반 조성: 국어 정보화의 기본은 자료와 지식의 축적 그리고 검색에 있다. 검색은 음소, 형태소, 단어 등의 언어 단위 차원에서 검색될 수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의 높이는?” 등과 같은 지식이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지구상의 인류가 쌓아 놓은 고도의 지식은 전부 한국어로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1)</sup>

#### 다. 찾아가는 국어 문화 교실의 확대 운영

- 1) 현재 공무원이나 국어의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어 문화 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 국어 문화 교실의 강의 내용에는 한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 아름답게 사용하는 내용의 교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교과목 운영은 온라인 강의 체계와 오프라인 강의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온라인 강의는 사회 봉사의 차원에서 대중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

10) 이러한 운동과 법제화는 미국을 본보기로 할 수 있다.

11) 한국어로 자료 구축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인류 공용의 차원에서 한국적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 라. 사전 사업의 다각화

- 1) 《표준국어대사전》의 대대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표제어 정비 작업도 이루어져야 하고, 뜻풀이도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2) 한국식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의 편찬 준비를 해야 한다. 사전의 구축이란 그 나라의 언어 정보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영어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 같은 사전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 3) 다양한 사전 편찬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술진통재단이나 개인 출판사에서 펴낼 수 있는 사전의 유형과는 구별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학문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어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사용 영역을 검토, 서구 개념의 수용과 변용 과정을 정리한 개념어 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문사철 외에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학제 간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 마. 표준화의 영역을 확대

- 1) 화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어는 언어 예절의 중요성이 남다른 언어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에서 기준으로 삼을 만한 표준 화법이란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표준 화법의 광범위한 정비가 필요하다.
- 2) 표준 문체를 확립해야 한다. 논문의 경우 주석 달기와 참고 문헌 작성법 등이 학문 분야마다 다르고 같은 학문 안에서도 달라 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 3) 전문 용어의 정비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 모든 전문 분야의 용어를 정비하고 표준화해야 하고, 동시에 학제 간 표준화도 해야 한다.
- 4) 공공언어의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률, 판결, 공문서 등에서도 아직도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정체 불명의 외국어 혹은 국어 조어법에 어긋나는 신조어 등을 사용하는데 이는 순화의 대

상이다. 지금까지 일부 문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전면적인 정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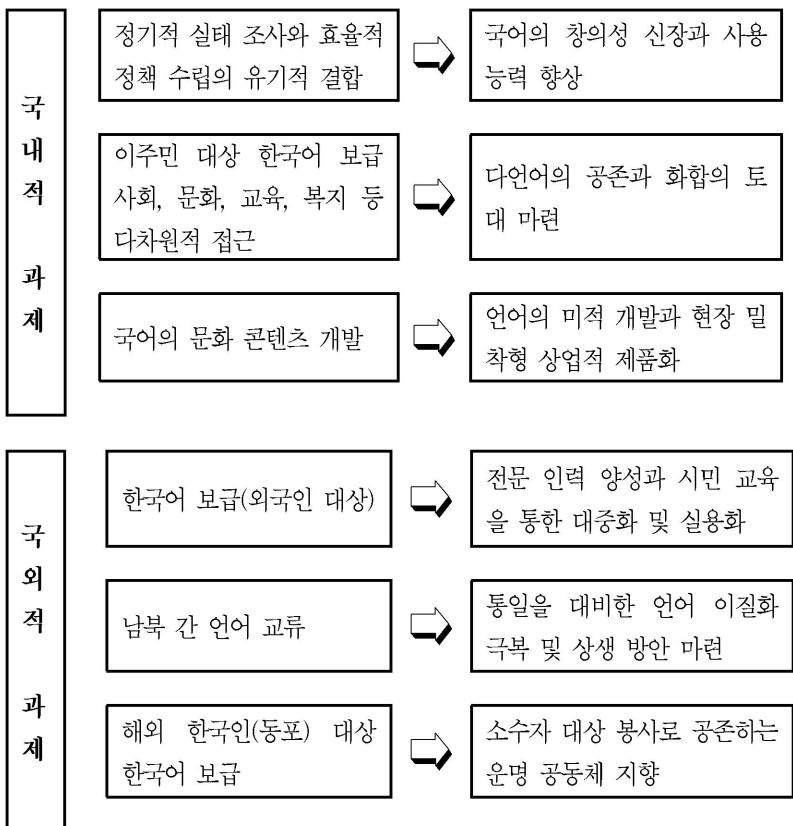
#### 바. 다문화 시대의 조화로운 인간형 창출

1) 공존과 상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주민들과 한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문화의 다원적 가치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인문 언어 중심의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외국인에 관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이 낮은 국민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한국 사회에는 이미 많은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과 관행은 단일 혈통 민족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여 이주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들에게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체성의 혼란만 더해 올 뿐이며 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주자들과의 사회 통합은 국민들 스스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주자들의 적응을 통한 사회 통합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 사. 정리

지금까지 논의한 국어 정책의 핵심 과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5. 추진 전략과 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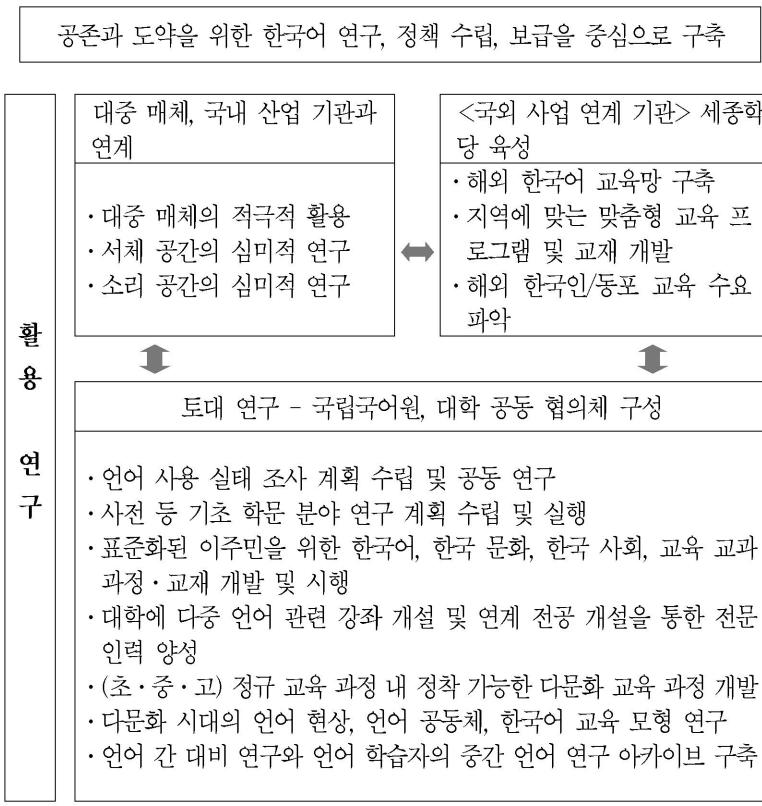
### 5.1. 추진 전략

○ 기본 전략: 본 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할 전략은 다음의 것들이다.

- 가. 국어원(정부)-대학-일반 사회의 삼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 나. <국내> 전국에 있는 국어문화원의 기능 강화 및 공조 체계를 구

## 축하여

- 다. <국외> 세종학당의 정체성 확립과 현지에서의 상보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 라. 사업 개발을 위한 국립국어원의 외연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구체 전략: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할 수 있다.



## 5.2. 장기 계획의 수립

모든 활동에는 단기 계획과 중기 계획 그리고 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국어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데 그를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계획은 3단계로 나누도록 하고, 항목은 목표 설정, 기획 및 연구, 연구 활용의 세 가지로 나누어 한다.

### <1단계>

#### 가. 목표 설정

- 기존 사업의 승계 및 새로운 사업의 구체화

#### 나. 기획 및 연구

- 기존 사업 파악 및 조정
- 확산 사업과 축소 사업 구분
- 외곽 세력의 의견 수렴 및 체계화 완성
- 구체적 업무 수행

#### 다. 연구 활용

- 세종학당의 업무 성과 비교 및 보완 체계 마련
- 국어문화원의 업무 성과 비교 및 보완 체계 마련
- 국어의 체계화 및 세계화의 구체적 활용 방안 모색

### <2단계>

#### 가. 목표 설정

- 계획의 구체화 및 체계화

#### 나. 기획 및 연구

- 1단계 평가에 의한 계획의 수정 보완, 구체화 및 체계화
- 사업의 체계적 수행

#### 다. 연구 활용

- 1단계 활용에 대한 평가 및 대체 방안 실행
- 인재 활용과 육성 그리고 발전 방안 모색

### <3단계>

#### 가. 목표 설정

- 계획의 마무리 및 미비점 목록화

#### 나. 기획 및 연구

- 계획의 마무리 실행
  -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검토
  - 새로운 발전 방안을 위한 자료 정리
- #### 다. 연구 활용
- 연구 활용의 종합적 결과 구축
  - 새로운 영역 개발을 위한 자료 정리

## 6. 마무리

국어 정책을 국어 정책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전체를 보면서 개개 정책의 선호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책 분야는 특히 이론과 실제의 조화가 필요하므로 위로부터의 아이디어 창출과 아래로부터의 현실적 필요성의 절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 정책의 핵심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가.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사용 능력 향상 정책 개발
- 나. 21세기 세종 계획의 후속 사업 개발
- 다-①. 다언어 사회 통합 관련 정부 정책 연구의 과학화 및 정책 대안 마련
- 다-②. 한국어 교육의 세계적인 확산

-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 언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라. 언어(국어)의 산업화
- 마. 학술 논문 및 저서의 국어화

## 7. 덧붙이는 말

국어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서 맺기로 한다.

### 가. 국어 기본법의 개정

국어 기본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초안은 2002년이나 2003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한다.(이 글의 필자도 초안 작성률 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초안에는 공공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강력한 조항들이 있었으나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들을 다시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수정하여 부활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문광부 입법 사항으로 하면서 국어 관련 업무의 최종 책임 및 권한이 전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상당 부분은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 나. 국립국어원의 위상 변화

국립국어원의 주요 업무는 한국어의 세계화, 체계화, 정보화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어에 관련된 예산과 인원, 업무를 국립국어원으로 이관시키는 동시에 국립국어원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1급 공무원을 원장으로 하는 현 체제에서는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다. 국어심의회의 활성화

국어에 관한 업무는 국립국어원이 주관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이지만, 국어에 관한 업무는 국어를 전공하는 학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맡게 되는 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언어 및 언어 교육과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가 같이 참여하여 국어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게 해야 할 것이다.

#### 라. 국어 책임관 제도의 효용화

국민의 국어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언어의 개선이 필수적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어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어 책임관 제도를 개선하고 효용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국어 책임관의 채용과 임명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국민의 공공 언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마. 국어상담소의 실질화

국민의 언어생활을 바르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기존 기구의 이름을 빤다면 국어상담소 내지는 국어문화원 등이 될 것이다.(그런데 하는 일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법령은 국어 상담소(혹은 국어문화원)를 통과하게 하고, 또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모든 학위 논문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혹은 등재 후보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은 국어상담소의 심사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사전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학술지가 평가를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권재일(2010), 세계화 시대의 국어 정책 방향, 『국어국문학』 155.
- 민현식(2000), 언어 규범 정책, 『21세기의 국어 정책』(국어 정책에 관한 학술회의 자료집).
- 박창원(2009), 『한국어의 정비와 세계화1』, 박문사.
- 안병희(2009), 『국어 연구와 국어 정책』, 월인.
- 윤광재(2008), 우리나라의 국어 관련 정책 및 기관에 관한 연구, 『동서연구』 20-1.
- 이정훈(2010), 언어 태도와 언어 정책, 『언어문화와 언어 정책』(한글 주간 국제 학술 대회 자료집).
- 조남호(2010A), 국어 정책의 현재와 향후 방향, 『언어문화와 언어 정책』 (한글 주간 국제 학술 대회 자료집).
- 조남호(2010B), 한국의 언어 정책,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 언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 자료집』.
- 조태린(2010), 언어 정책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20-2.
- 최용기(2010), 『한국어 정책의 이해』, 한국문화사.

